

투데이 칼럼

원전산업 분야의 정의실현을 위해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상단 기간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원전산업 분야에 있어서 사회정의는 요원하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이지만 받아들이기에 막연함이 있다.

중앙에서의 정의는 이익 앞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고 서양에서는 '각자에게 정당한 그의 몫을' 주는 분배의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소재지란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소재지 개념이 강한 10km에서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개념인 30km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빛원전의 경우 원전소재지는 영광군이, 주변지역에는 고창군이 위치하고 있다. 방사능 비상사태의 방향에 따라 영광군에는 피해가 전혀 없거나 일부 마을만 피해를 입고 고창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전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개념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고창군과 전라북도도는 영광군과 전남도에 못지않게 국가전력산업에 위해 노출되어있는 원전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도에 비례한 사회정의는 있거나 한 걸까?

원전분야 전체를 살펴보면 사회정의 실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원전 소재지와 비소재지 이분법적인 구태의연한 자세가 새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직도 원전분야 전체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원전 소재지면 모든 결정권을 다 주고, 원전이 없으면 개별 피해상황이 어찌되었든 자기 안전과 권리를 지킬 선택권마저 주어지지 않음이 그들이다. 방사능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오염된 작업복을 손빨래를 하던 원전 운영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 상 지원범위 5km 이내가 27년 동안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곳곳하게 지켜옴이 그렇다.

원전관련 지역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전 비소재지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무의미한 참여 인원 배정이 그렇다.

안전 자치권 확보를 위해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비소재지인 전북도에 설치되어야 함을 2012년부터 중앙부처를 상대로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음에도 주민안전보다 경제논리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이 또한 그렇다.

행정구역에 넘겨주어 광범위한 영향 미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지역 자원하고는 성격 자체가 상이하다. 비소재지에도 방재대책 재원 마련

세금부과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체에 대부분 사용하는 전기료 인상을 문제 삼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권을 주지 않음이 또한 그렇다.

사용 후 핵폐기를 부지 내 임시저장과 관련하여도 차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소재지 위주로만 세금을 부과케 한다는 등 이른 물이가 그렇다.

새 정부 들어와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역, 학력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 한사람 그대로의 능력과 가치를 보고 채용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원전에 있어서도 원전 인근 지역 피해상황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배분정책을 펼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안전을 선택하였다.

이제는 하루빨리 과거 정부의 원전진흥과 경제논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원전산업 분야의 사회정의가 실현되었으면 한다.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독자제언

갑질 횡포, 사람위에 사람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백화점 고객지킴이를 폭행하고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건, 공직이건 갑질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으며, 익숙해진 약자들은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뉴스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갑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곳의 심리상담센터에서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이 온 사방에 그 칼날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은 사회적 공존을 파괴하는 해악이다.

각자의 사회적 위치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절실하나 개인의 자질만

으로 갑질문화를 청산할 수는 없다. 이에 경찰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온 갑질문화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갑질 횡포로 인한 부패와 부조리를 털어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 만들기의 첫 걸음으로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자체적으로 사회 조직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갑질문화를 밝혀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국민들의 능동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려워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갑질 피해를 예방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다문화 자녀 학교폭력 예방 강화되어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에 취약한 탈북민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더불어 맞춤형 경찰 치안활동과 협력치안을 통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는 2016년 9만9000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 약 5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외모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친구 등으로부터 사회적 차별경험이 높고 다문화 가정임을 주위에서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만

을 대상으로 한 치안시책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 다문화지원센터와 공부방 등 다문화 가정 자녀들만 모여 있는 학교 밖 사각지대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개하고 다문화 자녀 대상 프로그램은 일반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거나 다문화 자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탈북·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학교폭력 피해 관련 첩보 입수 시 경찰서 학교폭력전담반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통역 및 심리상담사와 함께 심도있게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입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소정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설

전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대가 크다

전북도가 모처럼만에 밝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는 낭보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의 최종 사업 지역을 발표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전국 69개 지역의 공모사업을 확정된 것이다.

전북의 경우는 중앙공모와 광역공모에서 모두 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중앙공모에는 군산시와 익산시와 정읍시가 선정되었고, 광역공모에는 전주시와 군산시와 완주군이 선정되었다. 군산시는 중앙공모와 광역공모 양쪽에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는데 많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덕이지 싶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의 성과로 688억 원을 확보했다. 단일 사업

으로는 최대 액수라는 보고이다. 전북도가 중앙공모와 광역공모에서 성과를 냈지만 중앙공모는 전국 15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이 선정돼 전국 대비 5분의 1의 비율이다. 전남과 경남이 각각 2개 지역만 선정되고 다른 광역시도들은 1개 지역만 선정되거나 아예 단 한곳도 선정되지 않은 걸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는 달리 생각해보실 이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아무튼 전북도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큰 성과를 낸 것은 평가할 일이다. 이제 확보한 예산을 온전히 집행해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전북도와 해당 시군 지자체는 반드시 그레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전주시의 구도심 활성화사업 진척이 궁금하다

전주시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변화의 기미를 보여줘 기대가 컸는데 말이다. 구도심사를 철거한 이후 주차장으로만 활용되던 감영터에서 발굴작업을 벌인 것이 평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심했다. 발굴 작업과 그에 대한 보도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까닭이다.

얼마 전에 전주시가 전라감영박물관 재창조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고서 의견을 나누는 등 그것도 역시나 한 때의 호들갑이었지 싶다. 보도된 뉴스는 요란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잠잠하다.

전주시는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구도심을 문화와 인공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전주시가 매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일이 어느만큼 지났으면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미적거리는 게 역력하다. 그래서 본보는 열심을 내야 한다는 주문을 여러번 반복한 바 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여러 차례 공표했으므로 이제 박력있게 속도를 내야 한다. 방침을 호기있게 밝혔으면 일의 추진도 그래야 한다. 뜬 말은 식으로 길게 팔지 말라는 당부이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 힘차게 속도를 냈으면 한다. 앞으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만의 성한 반복해서 안 되겠기에 하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도시공간 재창조도 천명했으므로 실천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주시는 보다 분발해야 한다. 전주시는 구도심지의 환경이 어떤지 먼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구도심지인 서노송동 지역은 사람이 안 사는 폐가가 많다. 도로에서는 폐가들이 안보여도 높은 빌딩에서는 흉물스런 모습이 다 내려다 보이고 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전주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부문에서 선정되었으므로 이번에는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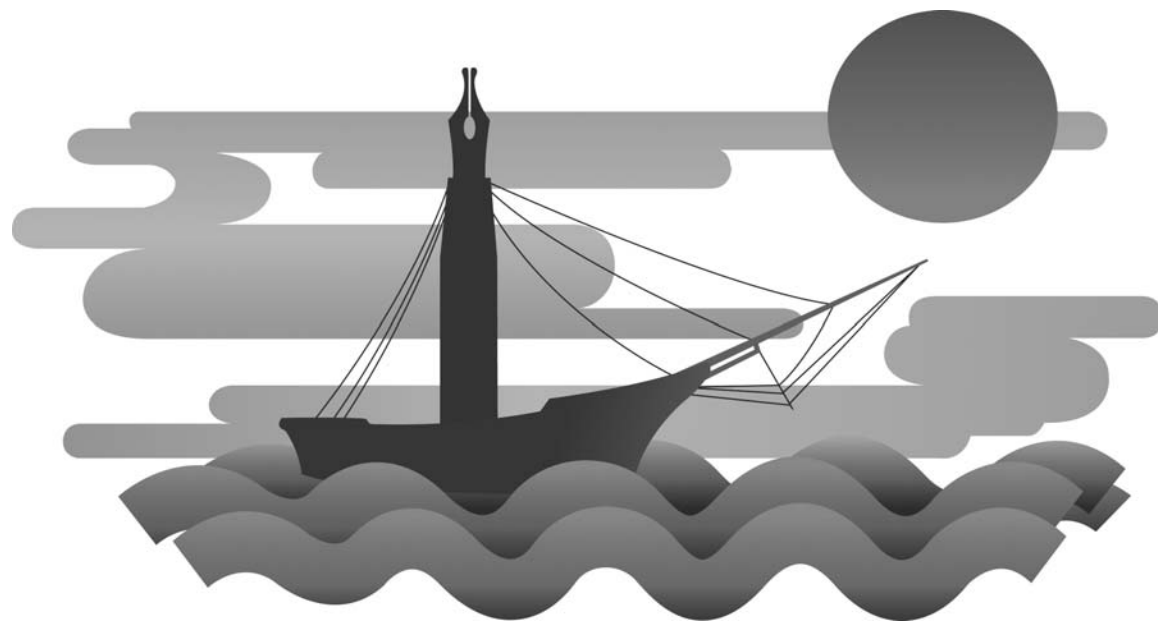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